

정치논리, 경제논리와 비교해 본 교육논리의 특징¹⁾

김 기 민(창원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요 약 》

“교육문제는 정치논리나 경제논리가 아니라 교육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어 왔지만, 이 세 가지 논리의 특징이 무엇인지는 별로 탐구된 적이 없었다. 이 연구는 이 세 가지 논리의 특징을 탐구하고 있다. 정치논리는 한편으로는 민주적 가치와 원리를 실현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위해 변전하는 대중들의 여론에 의존함을 그 특징으로 한다. 경제논리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율적 선택과 자유로운 경쟁을 선호함을 그 특징으로 한다. 교육논리는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되,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성장에 기여함을 그 특징으로 한다. 교육에 관한 주장이나 논설이 학습자의 성장에 기여함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때 여기에 교육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삶의 여러 영역에 대한 논리들이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는 한, 학습자의 성장이라는 교육논리도 예외일 수 없다. 교육논리의 객관적 근거로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진보적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도덕적, 인성적 특성들도 인정받고, 이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 정치논리, 경제논리, 교육논리, 이데올로기, 보수, 진보, 학습자의 성장, 객관적 증거나 근거

I . 들어가며

최근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고,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들면, 학력평가를 위한 전국 단위의 일제고사 실시, 교원평가제 도입, 학교정보공개제도 시행, 고교평준화 보완, 국제중 개교, 특목고 및 자사고 확대, 삼불정책의 재검토 등이 있다. 이 문제들은 비단 교육계 내부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그것은 이 문제들 자체가 워낙 중요한 교육문제

1) 이 논문은 2007학년도 창원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기도 하거니와 우리 사회의 정치적, 계층적, 지역적 이해관계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인구에 회자되는 주장 중 하나는 바로 “교육문제는 정치논리나 경제논리가 아니라 교육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이러한 원론적 주장에 동의하지만, 정치논리, 경제논리, 교육논리 등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 특징이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교육문제는 정치논리나 경제논리가 아니라 교육논리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는 점도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정치논리, 경제논리, 교육논리란 각각 무엇인가? 교육논리는 정치논리, 경제논리와 어떤 점에서 같으며, 어떤 점에서 다른가? 또 교육문제는 과연 정치논리나 경제논리가 아니라 교육논리에 입각하여 풀어야 하는가? 등등.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는 데는 몇 가지 서로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말들이 사용된 뉴스나 주장의 사례들을 찾아서 그것들 간의 의미를 비교·분석해 본다든지, 특정 사상가나 이론가들이 이러한 말들의 의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확인해 본다든지 하는 방식들이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탐구방식과는 다르게, 우리 사회라는 맥락을 전제하되, 이들 각각의 논리가 가지는 이론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려고 한다.²⁾ 우리 사회라는 맥락을 전제하는 이유는, 정치논리, 경제논리, 교육논리 각각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사회라는 맥락을 전제하지 않으면,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탐구방식에 입각하여 교육논리의 특징을 확인하되,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의 특징과 비교함으로써 교육논리의 특징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노력하겠다.

Ⅱ. 정치논리, 경제논리, 교육논리의 특징

우선 여기서 정치논리, 경제논리, 교육논리에서의 논리란, 어떤 문제에 대하여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다”든지 어떤 글이나 주장에 대하여 “논리가 정연하다”에서 지칭하는 “논리”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후자들의 경우 논리는 합리적이거나 체계적인 사고 그 자체를 지칭하거나 그러한 사고가 마땅히 따라야 할 원리나 규칙 등을 말한다. 그렇지만 교육논리, 정치논리,

2) 이제까지 이 세 가지 논리 중 두 가지를 비교한 연구들이 더러 있었다(장수명, 2002; 최병태, 2000; 홍기현, 1999 등). 이 연구에서처럼 세 가지 논리를 비교한 것은 별로 없었으며, 그것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각 논리의 특징을 제시한 경우는 찾기 어려웠다.

경제논리 등에서의 논리는 각각의 삶의 영역에서 지켜지거나 적용되는 원리나 규칙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것들이 성격상 반드시 ‘논리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힘의 논리”, “수요 공급의 논리”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이들 각각의 논리들이 그 자체로서 논리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힘의 논리”, “수요 공급의 논리”라고 할 때의 논리도 정치논리, 경제논리 등에서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그 논리들이 적용되는 영역이나 분야에서 지켜지거나 적용되는 원리나 규칙들을 의미한다. 이런 원리나 규칙들이 객관적 수준에서는 논리적이라고 평가받기 어려워도, 적어도 그 원리나 규칙들 간에는 비교적 잘 짜여지거나,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충분히 논리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논리란 일정한 원리나 규칙들이 엄격한 의미에서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그것들 간에는 비교적 잘 짜여져 있거나 연결되어 있으면서, 특정 영역에서 지켜지거나 적용되는 원리나 규칙들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논리란 무엇인가? 앞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흔히 교육논리는 정치논리나 경제논리와 대비되어 사용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가 각각 무엇인지를 밝혀보고, 이어서 교육논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정치논리의 의미와 특징

그럼 정치논리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일단 정치논리란 삶의 여러 영역들—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역사 등—중 주로 정치 영역에서 지켜지거나 적용되는 원리나 규칙들을 말한다. 그렇지만 때때로 삶의 다른 영역에도 넘나들며 적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예술계가 정치논리로 오염되고 있다”든지, “경제문제를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로 재단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든지 하는 말을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정치논리란 비단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정치적 가치나 특징을 적용하거나 구현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이하 경제논리나 교육논리에서도 각각 그대로 적용된다. 즉 경제논리나 교육논리도 주로 각각의 고유한 영역에서 적용되거나 구현되지만, 때로는 삶의 다른 영역에도 넘나들며 적용되거나 구현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정치논리란 그 특징을 어떠하다고 규정할 수 있는가? 다음 세 가지가 정치논리의 주요한 특징으로 규정될 수 있다.

첫째, 정치논리는 그 논리의 실제 배경이 되는 정치체제의 성격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정치논리는 민주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산주의 체제에서의 정치논리는 공산주의 가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이 보장된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 가치에 근거하여 자신의 정치논리를 정당화한다면, 우리는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할 것이며, 역으로 북한사회

에서 어떤 사람이 민주적 가치에 입각하여 자신의 정치논리를 역설한다면, 그 또한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논리는 그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배경이 되는 정치체제에 근거하여 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점이 타당하다면, 우리의 정치논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정치체제에 걸맞게 당연히 민주적 가치들을 실현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정당화되며, 그런 한에서 ‘우리의 정치논리’로 성립된다. 잘 알다시피,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적 가치들은 다음 두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추구하는 이념으로서 인권, 자유, 평등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다(이관희, 2008). 둘째, 이러한 이념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절차원리로서 법과 질서에의 복종, 토론과 타협, 다수결의 원리 등을 들 수 있다(강유원, 김영건, 석기용(역), 2008, pp. 627~668).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특정 정치논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그 속내가 무엇이든 간에, 적어도 겉으로는 이러한 민주적 가치들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정치논리를 포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정치논리는 ‘민주적’ 정치논리로 성립될 수 없으며,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가 없다.

둘째, 정치논리는 개인 또는 집단들이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인해, 중시되는 민주적 가치들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은 앞서 제시한 이러한 것들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주장되는 정치논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민주적 가치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개인 또는 집단들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이들 민주적 가치들 중 어떤 것들을 더 중시하고 상대적으로 어떤 것들을 덜 중시하느냐의 차이가 생겨난다.

물론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를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정의 즉 이데올로기란 (i) 세상을 일정한 방식으로 바라보거나 이해하며, (ii) 특정 정치 사회체제, 제도, 질서, 행태 등을 유지, 변화시키려는 집단적 행동을 지지, 정당화, 추진하는데 기여하는, (iii)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일련의 아이디어, 신념, 태도들로 규정한다(Freeden, 1998, pp. 681~685).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기존의 사회질서 자체를 유지 보존하려는 보수주의, 정치체제나 사회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자유주의, 온건한 사회개혁이나 개량을 거부하고 근본적인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급진주의 등으로 그 유형을 나누기도 한다(이광근(역), 2005, 제 4 장). 사상적으로는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보수와 진보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임석규, 2005; 김상수, 2008). 물론 보수와 진보는 연속선의 양 측면으로서, 극단적인 보수부터 시작하여 온건한 보수, 중도주의, 온건한 진보 등을 거쳐 극단적인 진보까지 다양한 가능성과 접근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여 규제를 풀고 자본가들의 재산과 역량을 확대하는 방향을 선

호한다면 그것은 보수적 성향으로, 평등을 중시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서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방향을 선호한다면 그것은 진보적 성향으로 각각 규정할 수 있다(김상수, 2008).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성향의 차이는 비단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구체적인 관점이나 행위의 차이로 나타난다.

셋째, 정치논리는 정치체제의 성격에 관계없이 현실정치 자체의 성격 즉 권력추구, 획득, 유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Skinner, 1981, pp. 23~53). 정치논리는 정치체제의 성격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권력을 추구, 획득,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흔히 “권력(힘)의 논리”라고도 한다. 이 점은, 앞서 제시한 정치논리의 첫 번째 특징 즉 정치논리는 그 논리의 근거가 되는 정치체제의 성격을 반영한다는 점과는 역설적인 관계로 비춰질 수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특징은 정치체제의 성격에 따라 정치논리가 ‘다르다’는 점을 역설하는데 반해, 세 번째 특징은 정치체제의 성격에 관계없이 정치논리가 ‘같다’는 점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하에서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듯이, 이 두 가지 특징은 역설적이지 않다. 오히려 이 두 가지는 정치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는 이상적으로는 플라톤(Platon)이 주장하듯이, 영원불변하는 진리나 실재를 추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담당해야 하는 활동일 수 있다(박종현(역주), 1997). 그러나 현실정치는 일찍이 16세기 초 마키아벨리(N. Machiavelli)가 『군주론(Il Principe)』에서 예리하게 통찰해 내었듯이, 변화무쌍한 변전과 외양 그 자체로서, 권력을 추구하는 치열한 현실세계이다(강정인, 김경희(역), 2008). 이 점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예에서 쉽게 드러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은 참 정치적이다”라고 할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실제 의도는 어떻든 간에, 적어도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자신의 행동을 조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하여 이렇게 정치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지지를 바탕으로 권력을 추구, 획득,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물론 진실로 정치적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판단도 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행동을 속일 수 있는 고도의 전술, 전략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군주로 대표되는 리더는, 그가 철저히 정치적인 사람이 되려면 일상적인 덕목들인 관대함, 인자함, 신뢰로움 등을 실제로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덕목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위의 책, 제 16, 17 장).

적어도 현실정치는, 마키아벨리의 주장처럼, 도덕적 인간들이 이상사회나 공동체의 건설이라는 가치에 헌신하기보다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서로 갈등하고 투쟁하는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그 본래적 모습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강정인(역), 1996, pp. 186~187). 이러한 점을 인정한다면, 군주나 리더들의 헌신을 통한 이상적인 국가나 공동체의 건설을 꿈꾼 많은 사상가들은 일단 정치의 본질적 특징을 제대로 통찰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현실정치의 본질적 특징에 비껴간 대표적인 예들로 우리

는 플라톤의 국가론,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의 신국론, 마르크스(K. Marx)의 공산주의 사회, 유학사상의 덕치주의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이므로 정치적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정치가가 아니라 국민이야말로 정치의 주체이다. 국민들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치의 변화무쌍한 변전의 기반이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가들은 항상 국민들의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즉 여론(public opinion)의 향배에 귀 기울이며, 여론을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유우종, 2008, 제 1 장). 물론 현실적으로 별로 가능하지는 않지만, 심지어 할 수만 있다면 정치가들은 여론을 조작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정치가들은 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덕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그렇게 보이는 정치가들은 국민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고, 여론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플라톤이 『국가·정체』에서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이상적인 국가에서의 정치는 영원 불변하는 진리나 실재의 실현이나 반영일 수 있다(박종현(역주), 1997, 제 4 권). 그러나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듯이, 현실세계에서의 정치의 변화무쌍한 변전과 외양 그 자체이다. 이 점은 정치체제의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현실정치가 가지는 구체적이며 지속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Skinner, 2002).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치논리는 명분으로는 민주적 가치들의 실현을 근거로 정당화되며, 실질적으로는 현실정치 자체의 특성인 외양을 그럴듯하게 보임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이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정치논리의 이 두 가지 특징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보여지는 것과 정치가가 실제 추구하는 것, 명분과 실리, 겉과 속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다.

2. 경제논리의 의미와 특징

정치논리에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면, 경제논리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경제논리는 다음 두 가지로 그 주요한 특징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경제논리도 정치논리와 마찬가지로, 그 논리의 실제 배경이 되는 경제체제의 성격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논리는 자본주의적 논리라는 점이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우리의 경제논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인 자본주의적 성격에 적절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의 경제논리인 자본주의적 논리를 줄여서 ‘자본의 논리’ 또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논리’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적 논리를 밝히기 전에 자본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기로 하자.

자본주의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와는 달리, 개인의 사유재산제도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며, 재화들이 시장을 매개로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도록 운용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www.wikipedia.org/capitalism). 자본주의 체제가 역사적으로 계속 변천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월러스틴(I. Wallerstein)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계속적인 변천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끊임 없는 자본축적을 지상과제로 생각하는 체제이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체제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다: (i) 자본의 생산과 축적을 위하여 지구상의 만물을 상품화하며, (ii)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치적 투쟁을 일삼으며, (iii) 합리성과 진리가 자본주의 체제를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정교하게 이용되고 있다(나종일, 백영경(역), 1993, 제 1 부)³⁾.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이른바 ‘자본주의적 논리’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자율적 판단의 존중과 효율성의 중시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i) 자율적 판단의 존중이란 각 개인은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이익이 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Homo economicus)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개인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여 합리적인 개인들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유익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주경철(역), 1997, pp. 855~861). 이러한 자율적 판단과 선택은 자본주의 체제가 지향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각 개인이 내린 자율적 판단과 선택의 결과는 어느 누구도 관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이므로, 그 결과도 각 개인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ii) 효율성의 중시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산출하려는 이익극대화의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끊임없는 자본축적이라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거의 필연적으로 채택될 수밖에 없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이희재(역), 2001).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경제주체들 간에 경쟁을 유도한다. 때때로 개인, 가게, 기업, 국가 등의 경제주체들 간에 협력적 경쟁(copetition: cooperation + competition)이나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의 일환이다(유영만, 2008). 블루오션(blue ocean) 전략(Kim, 2005), 펀 매니지먼트(fun management)(진수테리, 2007), 성공적인 리더가 되는 다양한 처세술(김경섭(역), 2003; 백기락, 2007), 셀러리맨으로 살아가는 자세(한민영(역), 2007) 등 처세나 성공을 위한 각종의 전략과

3) 월러스틴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분석 관점은 이른바 ‘세계체제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이론은 (i) 자본주의의 시작을 18세기 산업혁명 이후가 아니라 일찍이 16세기 지리상의 발견에서 시작된 식민지 개척을 통한 자본의 축적, (ii) 자본주의 체제의 분석 단위를 흔히 개별 국가 위주로 하는데 비해 전 세계의 차원으로 확대하되, 핵심부·반주변부·주변부 국가들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이광근(역), 2005, 제 2 장). 이러한 특징을 가진 세계체제이론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자본주의 체제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서 월러스틴의 생각을 인용하고 있다.

지혜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은 바로 치열한 경쟁에서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 출세하기 위한, 삶의 치열함과 고단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⁴⁾. 그리하여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항상 강조되지만, 많은 경우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 쉽게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부정부패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예외적으로 로또나 경마 등과 같은 달콤한 행운(luck)을 통하여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치열한 경쟁에서 오는 삶에 대한 회의나 피로감을 벗어나게 하기도 한다. 자본주의 체제는 이러한 경쟁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맡고 있으며, 시장이야말로 이러한 경쟁을 가장 공정하게 관리하는 장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들로 하여금 시장이라는 자유로운 경쟁체제 속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자본의 축적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적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경제논리도 정치논리와 마찬가지로 개인 또는 집단들이 추구하는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정치논리의 경우 이데올로기의 차이에 따라 중시되는 민주적 가치들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그렇지만 경제논리의 경우 이데올로기의 차이에 따라 경제논리 그 자체나 경제논리의 특징들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인해 경제논리를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유한수, 1996). 즉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들은 자본주의적 경제논리를 대체로 환영하거나 긍정할 것이다. 비록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불가피성을 인정할 것이다. 반면에 진보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들은 자본주의적 경제논리를 마지 못해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기는 해도 탐탁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또는 이들은 이러한 경제논리를 비판하거나 심지어는 이를 수정 변경하려고도 할 것이다.

3. 교육논리의 의미와 특징

우선 교육논리도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회체제의 성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 점은 앞서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또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교육은 이들 체제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하다.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체제에서의 교육도 마찬가지로 그러하다.

그렇지만, 교육도 정치처럼 그것이 이루어지는 체제의 성격과는 무관한 그 자체의 본질적

4) 이러한 전략들의 개요들은 대체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이러한 전략들을 알리는 것이 이 연구의 주 내용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용보다는 대표적인 전략들 자체의 제시에 그 치도록 한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교육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서, 흔히 이것을 교육의 ‘내재적 가치’ 또는 ‘내재적 목적’이라고 칭한다. 물론 교육에는 외재적 가치 또는 외재적 목적도 분명히 있다. 예를 들면,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재를 기른다는지, 사회계층 상승의 충실한 사다다리가 된다는지 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외재적 가치나 목적은 교육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인간 삶의 다른 영역이나 활동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목하 우리의 관심은 교육 그 자체의 본질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교육의 외재적 가치보다는 내재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기로 하자.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무엇으로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존 듀이(J. Dewey)가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교육이란 학습자의 성장에 헌신하는 활동이라는 점이다(이홍우(역주), 2007, 제 4 장). 성장으로서의 교육(education as growth)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회체제 속에서 그 체제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그것들이 학습자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인정한다. 그렇지만 만약 그 체제가 요구하는 가치들이 학습자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교육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경우 교사는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들을 가르치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옳은 것이 아닌데...”라고 생각할 것이다. 여기에서 교육논리의 특징 즉 학습자의 성장을 다른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측면이 여실히 드러난다.

교육의 논리를 학습자의 성장으로 규정할 때, 성장으로서의 교육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 성장으로서의 교육은 교육에 대한 비유적 설명과 다르다는 점이다. 사실 성장으로서의 교육은 주형으로서의 교육(education as molding)과 더불어 교육에 대한 대표적인 비유적 설명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김기수, 조무남(역), 2002, pp. 51~58). 교육에 대한 비유적 설명으로서의 성장은 학습자를 식물이나 어린 나무(묘목)에, 교사를 정원사에 각각 비유하고 있다. 이 비유에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교육의 세 가지 요소 중 두 가지 즉 학습자와 교사의 특징이 무엇인지는 이 비유에서 잘 드러나지만, 나머지 한 가지 즉 교육과정(curriculum)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사를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 ‘성장으로서의 교육’은 그 성장의 사회적 맥락인 사회체제가 추구하는 가치들로부터 기본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성격을 일정하게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성장으로서의 교육은 사회체제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넘어서는 것이 학습자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체제 자체의 성격에 구속되어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 연구에서 성장으로서의 교육은 존 듀이가 『민주주의와 교육』에서 주장하는 의미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둘째, 성장으로서의 교육은 학습자의 특성들 중 어떤 것에 초점을 두느냐에 대하여 배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때때로 사람들은 학습자의 특성들 중 어떤 것을 교육에서 강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다른 주장들을 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교육에서 이론적 지식을 가르쳐서 현상을 보는 안목을 강조하기도 하며(이홍우, 1998), 어떤 사람은 창의성이야말로 교육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특성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김용남, 1995).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한 가지 특성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의 추구야말로 교육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한다(민영주, 전인교육연구소, 2005). 성장으로서의 교육은 학습자의 특성들 중 어느 하나를 강조하든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강조하든 또는 그것들 간 조화를 강조하든 간에, 인간의 바람직한 성향인 한에서는, 어떤 것들도 허용하고 수용하는 입장을 말한다. 사실 교육이란 학습자의 성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시키는 한, 어떤 특정 입장을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셋째, 성장으로서의 교육은 교육의 전반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평가 등 교육의 전반적인 과정이 학습자의 성장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적절하게 설정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그 자체로서는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 엄격한 훈육 등도 학습자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교육의 과정 중 일부분으로 채택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비록 교육의 전반적인 과정은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학습자의 성장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이를 환류(feedback)시켜 교육의 전반적인 과정은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교육의 전반적인 과정이 결과적으로 학습자의 성장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교정 또는 수정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성장으로서의 교육은 교육의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도 동시에 중시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성장으로서의 교육은 학습자, 교사, 교육의 과정에 대하여 일정한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장으로서의 교육이 이들 세 가지에 대하여 전제하는 관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i) 학습자: 아직 성장되지 않은 미성숙한 상태 또는 성장의 도중에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는 더 나은 성장이 기대되는 존재이다. 학습자의 이러한 미성숙 또는 성장 도중의 상태는 보다 풍성한 성장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는 언제나 환영받을 일이다. (ii) 교사: 학습자의 성장을 지도하고 이끄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교육의 원리와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식견, 학습자에 대한 이해, 구체적인 교육장면에서의 열정과 헌신 등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iii) 교육의 과정: 교사와 학습자의 역동적 상호작용이다. 학습자가 스스로 성장하기는 쉽지 않고, 교사라고 해서 교육의 일반적 원리를 확일적으로 적용해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교육은 교사와 학습자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자의 성장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교육논리를 이러한 특징을 가진 성장의 논리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바로 교육논리도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사실 이데올로기에 주목하게 되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 또는 활동들은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것은 앞서 우리가 규정한 이데올로기의 성격상 그러하다. 그리하여 우리는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가 이데올로기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제 교육논리와 이데올로기의 관련성을 살펴보자. 그 관련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들은 교육에서 개인의 탁월성, 경쟁, 학력, 교과중심, 교사주도, 착실함 등을 강조할 것이며, 진보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들은 사회적 평등, 협동, 인성, 아동중심, 학생의 자기 주도, 파격 등을 강조할 것이다(김기수, 조무남(역), 2002, p. 136; O'Neill, 1981, part II & III). 결국 보수적 이데올로기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능력의 신장, 사회의 질서 유지 등과 같은 가치들을 교육에서 중시할 것이며, 진보적 이데올로기에서는 사회적 평등과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의 변화 추구 등과 같은 가치들을 교육에서 중시할 것이다.

4. ‘고교평준화정책’에 비추어 본 세 가지 논리의 특징 비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논리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교육문제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를 고찰해 보자.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문제들 중 ‘고교평준화정책’의 경우를 예로 들어 이 점을 고찰하겠다. 왜냐하면 이 정책은 1974년부터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큰 틀을 유지하고 있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도 유지 보완이나, 아니면 폐기이나를 두고 계속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고교평준화정책’이란 특정 지역 내에서 추첨을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생들을 일반계(인문계) 고등학교에 배정하는 방식을 견지하는 정책을 말한다. 대체로 이 정책에 대한 논란들은, 이 정책으로 인하여 (i)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는 것 아닌가, (ii) 고등학교 교육을 획일화하여 이른바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하향평준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iii) 고등학교들이 다양하게 특성화되는 것을 저해함으로 해서, 특히 사립학교들의 자율성이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 아닌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강태중, 2001; 윤종혁 외,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i) 소위 그동안 잘 나가던 “일류 명문 고등학교”들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학벌위주의 엘리트주의를 상당 부분 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ii) 중학교 교육과정의 고교진학을 위한 입시준비라는 고리를 끊음으로써 상당 부분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이룩하였고, (iii)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간 교육격차가 상당히 해소되고, 고등학교들 간 수준차이도 많이 완화되었다는 점이 장점으로 인정되어 왔다(윤종혁 외, 2005).

이 연구는 ‘고교평준화정책’에 관한, 이러한 논란거리와 장점들 각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물론 이것들 각각은 그 자체로서 탐구해 볼만한 중요한 교육문제이며, 사회적 관심거리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 연구의 관심은 이것들 각각이 타당한지 혹은 타당하지 않은지보다는 세 가지 논리에 입각해 볼 때,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하여 어떤 주장을 펼 수 있으며, 그것들 간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이다. 이하에서 우리는 각각의 논리에 입각하게 되면,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해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정치논리의 경우 이 정책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주장은, 지난 대선 때 한 통신사의 다음과 같은 보도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연합뉴스, 2007/10/18). 이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는 고교평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그) 후보는 “고교평준화가 30 년간 지속되면서 교육이 상향이 아니고 하향평준화가 됐으며 교육 질이 너무 떨어졌다”며 “하향평준화 정책으로는 더 이상 인재양성도, 교육선진화도 어려우며 특성화와 상향평준화로 가야 한다”고 비판하고 “평준화를 명분으로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는 것은 기회의 불평등을 강요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 후보는 이어 “학생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와 특성화 교육을 위한 마이스터고, 기숙형 공립고교 등을 통해 고교교육을 다양화하겠다고 하니까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며 “세계 유수의 사립학교들은 고액의 등록금을 받는 대신 정원의 일정비율을 저소득층의 우수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반해 다른 한 후보는—이것 역시 그 보도에 따른 것이다—, 전혀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그) 후보는 “평준화의 해제는 곧 입시지옥의 부활이며 엄청난 혼란과 사교육비의 천문학적 증가를 일으킨다”며 “(보수진영의) 후보가 자립형 사립고를 100 개, 기숙사 150 개, 특목고 50 개 등 특별한 학교를 300 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300 개를 제외한 나머지 1,100 여개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는 뭐냐”고 반문하고 “바로 삼류학교를 만드는 것이고 유치원, 초·중학교를 입시지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후보는 “중·고등학생들을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해방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이고, 그러려면 사교육비를 혁파해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 한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2008 년부터 1 년을 교육혁명을 위한 사회적 대협약의 해로 선포하고, 2 년간 준비해 2011 년을 교육혁명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고교평준화에 대하여 뚜렷이 대비되는 이 두 주장들 중 보수진영의 후보가 첫 번째 주장을, 진보진영의 후보가 두 번째 주장을 각각 내세웠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 제시한 보수적, 진보적 이데올로기와 교육적 가치들의 관련성에 비추어 보면,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정치논리에서는 그들의 정치적 입장 자체보다는 대중들

생각의 반영인 여론이 더 중시된다는 사실이다. 보수진영이 정치권력을 획득했지만, 대중들이 여전히 고교평준화를 선호한다면 이 정책을 상당 부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여론이 그러하다면, 이 정책을 다소간 수정 보완할 수 있지만, 완전 폐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역으로 만약 진보진영이 정치권력을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이 정책의 폐기를 주장한다면, 역시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치는 변전하는 외양 그 자체이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가 따라야 할 외양의 표준은 곧 여론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가 수시로 변하는 여론에 따라갈 수도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는 것은 일종의 상식이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는 여론을 의식하며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상식이다.

경제논리에 입각해 볼 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자율적 판단을 강조하는 한, 대체로 고교평준화정책에 반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정책은 학부모나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과 자율적 판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개인의 이러한 선택과 판단이 지나치게 존중되어, 국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나 경쟁력을 떨어뜨릴 정도로 개인들 간의 과도한 경쟁과 비용의 지출이 이루어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 정책을 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미시적 경제효율성과 거시적 경제효율성이 서로 대립되고 충돌할 수도 있다. 또한 이데올로기적 성향의 차이에 따라 이 정책에 대한 입장도 차이가 날 것임은 분명하다. 즉 자본주의적 논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 정책에 반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교평준화정책이 학교교육의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자유로운 학교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자본주의적 논리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 정책에 찬성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정책을 폐기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 제약으로 인하여, 그 전에는 갈 수 있었던, 신흥 명문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육논리에 입각하면, 우리는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하여 무어라 말할 수 있는가? 학습자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교육논리라는 이 연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당연히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고교평준화정책의 시행은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적 의도에서 비롯되었는가? 실제로 이 정책은 그것을 시행하기 전보다 또는 시행하지 않은 경우보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또는 근거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학력, 인성, 사회성, 전인적 발달 등 중에서 어떤 것을 학생들의 성장을 판단하는 준거로 삼아야 할 것인가? 대체로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든지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 하는 판단은 가능한 것인가? 등등. 이들 질문에 답하다 보면, 교육논리에 입각하여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먼저, 고교평준화정책이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려는 교육적 의도에서 비롯되었는지는

중요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를 확인하려면 그 당시 즉 1974년 이전 고교평준화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관련한 정치가들이나 정부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관련 고위관료들의 실제 생각과 행동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정책에 명실상부하게 관여한 사람들은 누구였으며, 그들은 현재 살아 있는가?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사실대로 말해줄 것인가? 그 당시 그들의 행동은 말과 일치했는가? 이런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면 이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주장하고 싶은 바는, 교육정책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게 정치논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고교평준화정책에 교육적 의도가 개입되었든 개입되지 않았든 간에,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어떤 정부의 정책이든 그것이 채택되고 시행된다는 것은 정치논리와 무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앞서 마키아벨리의 주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정치권력은 그 자체를 유지 존속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kinner, 1981). 그러므로 모든 정부의 정책들은 정치권력을 유지 존속하려는 정치논리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하여 교육정책도 일정 부분 정치논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떤 교육정책을 논할 때, 순전히 교육논리에 입각하여 그 정책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은 너무 순진한 일일 수 있다. 물론 교육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그것이 교육정책인 한, 교육논리에 비추어 그 점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교육정책에 정치논리가 개입되어 있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그 정책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핵심을 벗어난 것일 수 있다. 특정 교육정책이 기본적으로 교육논리에 비추어 그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논리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

둘째, 고교평준화정책이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증거가 있느냐는 점은 이른바 이 정책의 주요 논란거리 중 하나인 ‘하향평준화’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이다. 이 정책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하향평준화한다는 주장과 추측은 많았지만,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나 연구결과는 별로 없다. 오히려 고교평준화정책이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하향평준화했다는 주장은 별 근거가 없다는 연구결과들은 나와 있다(성기선, 2002; 박부권, 2004; 강상진 외, 2005).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책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우리는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말해주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점과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주장하고 싶은 바는, 교육논리에 입각한 교육정책에 대한 주장은 그 정책이 학생들의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였느냐 또는 기여할 수 있느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나 근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이제까지 교육정책에 대한 주장들 중 상당수는 학생들의 성장에 기여한 객관적인 증거나 근거에 입각하지 않고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교육정책에 대한 주장들은 반드시 교육논리에 근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논리나 경제논리와 혼재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치논리나

경제논리에 근거한, 교육정책에 대한 주장들이 객관적인 증거나 근거를 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 경우 그 주장들은 그 각각의 논리에 충실한 객관적인 증거나 근거를 가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와 동일하게 교육정책에 대한 주장도 적어도 그것이 교육논리에 근거하고 있다면, 학생들의 성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나 근거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바로 교육논리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배반하는 셈이다.

셋째, 학생들의 성장을 판단하는 준거가 무엇이어서 하는가라는 질문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성장으로서의 교육이 학습자의 바람직한 성향에 관여하는 한, 어떤 것들도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교육정책을 교육논리로 평가할 때, 학생들의 성장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람직한 것 모두를 포함할 수는 없다. 사실 앞서 제시한 여러 가지 것들, 즉 학력, 인성, 사회성, 전인적 발달 등이 모두 해당된다고 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육논리들 간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사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논리도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우리가 학생들의 성장을 판단하는 준거도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럴 경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합리적 태도는, 학생들의 성장 판단 준거가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보수적 이데올로기와 진보적 이데올로기 각각이 중시하는 교육적 가치들을 동시에 고려해 보는 것일 것이다.

교육논리의 전개도 정치논리나 경제논리의 전개와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그러므로 교육논리를 합리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보수적 이데올로기에서 중시하는 가치들 예를 들면, 개인의 탁월성, 학력, 착실함 등에서 어떤 근거나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진보적 이데올로기에서 중시하는 가치들 예를 들면, 사회적 평등, 협력, 파격 등에서 어떤 근거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논리성, 창의성, 비판적 사고, 관용 등과 같이,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관계없이 중시될 수 있는 교육적 가치들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객관적 증거들은 주로 학업성취도에 관한 것이었다. 사실 학업성취도만큼 학생들의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척도도 많지 않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성장을 판단하는 준거가 학업성취 일변도이어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학업성취도로 대표되는 학력이 강력한 객관적인 준거이기는 하지만, 교육에서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준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교육에서 진보적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가치들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이것을 학업성취도로 대표되는 보수적인 교육가치들과 함께 검증하고 객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당수 사람들은 고교평준화정책으로 인한 학력의 하향평준화가 근거 없다는 연구결과들

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고교평준화정책의 폐지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그것은 아마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도출한 연구의 절차나 방법 등이 미덥지 않아서가 아니라, 학력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교육적 가치들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의 이해를 이끌어 내고 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에서의 진보적 이데올로기가 중시하는 교육적 가치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증거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학력으로 대표되는 보수적인 교육가치들과 인성으로 대표되는 진보적인 교육가치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고, 이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증거를 동등하게 제시하려는 연구와 노력을 기대한다.

교육논리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정책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는 학생의 성장이지만, 이것보다는 비중이 약하지만, 다음 두 가지도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i) 교사들의 전문적 자질 향상과 (ii)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정도와 질적 수준이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II장 3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학습자의 성장’을 추구하는 활동으로서 교육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들은 학생의 성장만큼 의견차이가 심하지 않다. 그리하여 교육논리에 비추어 볼 때, 어떤 교육정책이 교사들의 전문적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며,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보다 활발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는지도 탐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한다.

넷째,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성장에 미친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질문도 검토해 볼만한 문제이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지적한 점 즉 교육논리는 학생들의 성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나 근거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틀렸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가능성”이란 이론적 가능성이라기보다는 현실적 가능성을 말한다. 즉 이 질문의 배후에는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미심쩍어하는 심리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강조하고 싶은 바는, 교육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많은 교육적 쟁점이나 논란거리들을 잠재울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물론 학교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그것이 특정 교육정책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는 것은 더 더욱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교육의 효과는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이며, 점진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임에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학교교육의 결과를 측정할 수 없다거나, 이에 관련된 교육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적어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또한 어떤 교육정책들이 그러한 학교교육의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더러 있다(김성식 외, 2007; 김성열, 변민석, 2005; 이종재 외, 2001; 조난심 외, 2001; Silver, 1994; Teddlie & Reynolds, 2000 등).

어떤 일을 하기 어렵다는 것과 그 일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다르다. 교육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것과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 사실 미숙한 존재를 성숙한 존재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활동으로서의 교육은 그 자체가 지극히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그 효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의 결과나 교육정책의 효과도 장기적으로 접근하고 꾸준히 확인해야 함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가 한 가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나서서 이에 대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장기적이면서도 방대한 자료와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 또는 몇몇 전문가나 학자들이 수행하기에는 어렵다. 물론 이들 기관들이 앞서 보았듯이, 이제까지 이러한 연구들을 해오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이러한 연구들을 기획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때 앞서 논의하였듯이, 학력으로 대표되는 보수적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협동심이나 비판적 태도와 같은 정의적, 인성적 특성도 중요한 교육적 준거로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연구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그 결과가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비록 이들 기관들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롭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정부가 학교교육의 결과나 교육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에 관여하거나 일정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들 기관들이 가지는 공신력과 신인도가 추락하고, 이들 기관들의 다른 연구들도 그 결과의 진실성을 의심받게 된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정부에서도 이 점을 특히 유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때, 국민들은 객관적인 연구결과에 근거한 특정 교육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신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해 주는 정부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Ⅲ. 나오며

사회적 제도로서의 교육은 인간 삶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로서, 개인들의 관심사이자 국가 전체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육문제를 진단하고 이의 해결에 동원되는 논리가 전적으로 교육논리에 의존할 수는 없다. 어쩌면 교육의 영역에 정치논리나 경제논리가 개입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인지도 모른다. 또한 교육에 관한 어떤 주장이나 논설들

이 정치논리, 경제논리, 교육논리 중 어느 하나에만 입각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정치논리, 경제논리, 교육논리는 서로 구별되는 삶의 영역만큼이나 다른 종류의 논리임에 틀림없다.

정치논리는 힘의 논리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힘은 여론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정치논리에 입각한 교육관련 주장이나 논설들은 대중들이 원하는 바를 살피고, 이에 입각하여 그 정당성을 주장한다. 경제논리는 시장의 논리로서, 개인의 자율적 판단과 효율성을 중시한다. 그러므로 경제논리에 입각한 교육관련 주장이나 논설들은 개인의 자율적 판단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주장한다. 물론 이들 주장이나 논설들은 그러한 정당성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정치나 경제는 당위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사실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교육논리는 기본적으로 학습자의 성장을 추구하는 논리로서, 모든 교육활동은 학습자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논리에 입각한 교육에 관한 주장이나 논설들은 학습자의 성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증거가 별로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왜냐하면 교육은 한편으로 사실의 영역에 속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지향하는 당위적 성격을 띠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논리에 입각한 교육에 관한 주장이나 논설들은 학습자의 성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증거에 의존해야 함을 충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학습자의 성장을 판단하는 준거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가이다. 우리가 교육에서 바람직하게 여기는 측면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즉 학력, 체력, 건전한 인성, 창의성, 비판적 태도, 논리적 사고 등등이 그것들이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변수는 다름 아닌 이데올로기이다. 우리는 같은 사회에 살고 있지만,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대체로 보수와 진보라는 연속선상의 양 측면을 중심으로 다양한 입장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차이는, 이데올로기의 성격상, 정치, 경제, 교육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현상의 이해 차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강령의 차이로 나타난다.

교육에서 학력으로 대표되는 보수적 이데올로기와 인성으로 대표되는 진보적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함을 인정한다면, 교육논리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즉 학력이 학생의 성장을 판단하는 객관적이고도 강력한 준거가 됨을 인정하면서도, 학력 이외에 협동심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 등과 같은 도덕적 혹은 인성적 특성을 구체화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일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학력의 구체적 지표인 학업성취도 연구들만으로는 진보적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사람들을 설득하고,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논리들이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

롭지 않은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리하여 한 사회 속에서 이데올로기적 성향의 차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현상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 행위에서 차이가 나며, 이는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학교교육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사회통합은, 그것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주로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통합을 말한다. 교육논리에 있어서, 한편으로 특정 교육제도, 교육정책, 학교체제 등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객관적인 근거나 증거에 입각하여 확인하는 연구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다른 한편으로 학업성취도 외에, 도덕적, 인성적 특성 등의 준거를 개발하고 이에 비추어 학습자의 성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려는 연구들도 더욱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후자의 연구들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 있는 교육연구일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통합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연구들이다. 왜냐하면 객관적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극복하게 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이다(노병철 외, 2000). 물론 이 점은 모든 사실이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하는 말이다.

참 고 문 헌

- 강상진 외(2005). **고교평준화정책 효과의 실증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강유원, 김영진, 석기용(역)(2008). **철학: 더 나은 삶을 위한 사유의 기술**. Papineau, D.(ed.). Philosophy. 서울: 유토피아.
- 강정인(역)(1996). **마키아벨리의 이해**. Skinner, Q.. Machiavelli.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강정인, 김정희(역)(2008). **군주론(제3판)**. Machiavelli, N.. Il principe. 서울: 까치글방.
- 강태중(2001).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향방에 대한 논란. **교육비평 제5호**, 102-119.
- 김경섭(역)(2003).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Covey, S. R..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서울: 김영사.
- 김기수, 조무남(역)(2002). **교육철학탐구(제2판)**. Hamm, C. M.. Philosophical issues in education. 서울: 교육과학사.
- 김상수(2008). **보수와 진보 이념을 넘어선 영국의 현실정치**. 서울: 책세상.
- 김성식 외(2007). **한국교육중단연구 2005(Ⅲ): 조사개요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김성열, 변민석(2005). 현행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내적 조건의 진단과 개선방안. **교육행정학연구**, 23(3), 1-24.
- 김용남(1995). **이제 창의력만이 살길이다**. 서울: 종로서적.
- 나종일, 백영경(역)(1993). **역사적 자본주의/자본주의 문명**. Wallerstein, I.. Historical capitalism/Capitalist civilization. 서울: 창작과 비평사.
- 노병철 외(2000). **현대사회와 이데올로기**. 서울: 인간사랑.
- 노효동(2007년 10월 18일). 鄭—李 금산분리, 교육정책 충돌. **연합뉴스**.
- 민영주, 전인교육연구소(2005). **전인교육의 실천**. 서울: 쓰리라이프.
- 박부권(2004).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논란과 전망. 황원철, 김성열, 고창규(편). **공교육: 이념 · 제도 · 개혁**(250-276). 서울: 원미사.
- 박종현(역주). **국가 · 정제**. Platon. Politeia. 서울: 서광사.
- 백기락(2007). **잭 웰치의 리더십**. 서울: 엔타임.
- 성기선(200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학력 하향화현상. **교육사회학연구**, 12(3), 121-135.
- 유영만(2008). **상상하여 창조하라**. 서울: 위즈덤하우스.
- 유우종(2008). **여론조사의 비밀**. 서울: 궁리.
- 유한수(1996). **경제의 논리, 정치의 논리**. 서울: 오름시스템.
- 윤종혁 외(2003). **고교평준화정책의 적합성 연구 I**. 한국교육개발원.
- 이관희(2008). **한국민주헌법론 1**. 서울: 박영사.

- 이광근(역)(2005). **월러스틴의 세계체제 분석**. Wallerstein, I.. *World-systems analysis: An introduction*. 서울: 당대.
- 이종재 외(2001). **학교교육 실상분석 및 공교육 내실화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이홍우(1998). **교육의 목적과 난점(제 6 판)**. 서울: 교육과학사.
- 이홍우(역주)(2007). **민주주의와 교육(개정판)**. Dewey, J.. *Democracy and education*. 서울: 교육과학사.
- 이희재(역)(2001). **소유의 종말**. Rifkin, J.. *The age of access*. 서울: 민음사.
- 임석규(2005). **보수와 진보**. 서울: 생각의 나무.
- 장수명(2002). 교육에 대한 교육논리와 경제논리의 갈등과 대화. **교육개발 134호**, 50-57.
- 조난심 외(2001). **학교교육 내실화방안 연구 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주경철(역)(1997).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II-2: 세계의 시간 (하)**. Braudel, F.. *Civilisation matérielle, économie et capitalisme, XV-XVIII siècle tome 3. les temps du monde*. 서울: 까치글방.
- 진수테리(2007). **편을 잡아라**. 서울: 김영사.
- 최병태(1999). 교육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 **충남대학교 인문학연구 27권 1호**, 137-165.
- 한민영(역). **샬러리 맨 회사에서 살아남기**. WANG HONG MEI. ZHE YANG SHUO HUA ZUI YOU XIAO. 서울: 넥서스.
- 홍기현(1999). 경제논리와 정치논리. **오토저널(구 자동차공학회지)**, 21(6), 76-78.
- Freedden, M. (1998). Ideology. Craig, E.(ed.).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 IV, 681-685.
- Kim, Chan (2005). *Blue ocean strategy*.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O'Neill, W. F. (1981). *Educational ideologies: Contemporary expressions of educational philosophy*. Santa Monica: Goodyear Publishing Company, Inc..
- Silver, H. (1994). *Good schools, effective schools: Judgments and their histories*. London: Cassell.
- Skinner, Q. (1981). *Machiavelli: A very short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kinner, Q. (2002). *Vision of politics* Vol. III: *Hobbes and civil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eddlie, C. & Reynolds, D. (2000).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school effectiveness research*. London: Routledge Falmer.
- www.wikipedia.org/capitalism

• 논문 접수 : 2008년 12월 24일 / 수정본 접수 : 2009년 2월 9일 / 게재 승인 : 2009년 2월 20일

ABSTRACT

A Philosophical Investigation into the Logic of Education compared with the Logic of Politics and the Logic of Economy

Kim, Ki Min(Professor,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gic of education compared with those of the logic of politics and the logic of economy.

The logic of politics needs to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wo aspects. In the formal aspect, it may be summarized as the logic of democracy pursuing the respect of human rights, liberty, equality and the due process. In the substantial aspect, it may be summarized as the logic of hypocrisy which is necessarily required for the hold of power, the agreement of people and the control of system.

The logic of economy can be summarized as the logic of market because the target of this study is the capitalistic economy. It may be characterized as follows: (i) the autonomy of choice which presupposes Homo economicus and free market, (ii) the pursuit of efficiency which means achieving a maximum of benefit at a minimum of expense.

The logic of education may be summarized as the logic of growth because every educational activity focuses on the growth of learners. The criteria of the growth of learners have to include both academic achievements representative of conservative ideology and moral or personality traits representative of progressive ideology in education. Because every logic of the realms of life cannot be free from ideology and some kinds of conservative vs. progressive ideology still conflict with each other in education or schooling. The assertions of education or the pros and cons of a certain educational policy have to be founded on some objective evidences or grounds of these criteria of the growth of learners.

Key words : the logic of education, the logic of politics, the logic of economy, conservative vs. progressive ideology, the growth of learners, objective evidence or ground